

일본의 한국사 인식

林 建彦 阿部 洋 역음

삼민사 편집부 옮김



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외곡」에 대한
양심적 일본 학자들의
종합 진단서!!
‘역사의 진실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통한
한·일간의
역사적 화해를 염원하며
일본의 전문학자 31인이
공동 집필하였다.

삼민사

엔도 기미즈꾸(遠藤 公嗣)
야마가타대학(山形大學) 조교수

(1) 전시경제 하 노동력 부족

1937년부터 시작된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은 당시 일본정부에 의해 ‘일화사변(日華事變)’이라 불려졌다. 광활한 중국에 대한 침략은 한껏 커진 군대를 동원하여 파병하였고, 이에 따라 그 군대가 사용할 군수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었다. 전차와 군용기의 생산은 말할 것도 없고 군복과 약품 등의 생산도 필요하였고, 원료인 각종 금속광석의 채굴과 최대 에너지원인 석탄의 채굴, 그것에 필요한 공장을 확장하고 도로와 항만을 정비하는 토목공사도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모든 산업은 증산을 위해 군수경기가 부양되었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대폭으로 증가하였다. 그 수요는 공금을 훨씬 웃돌고 있었고, 한편으로 많은 남자가 군대에 소집되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이 각 산업에서 일시에 일어나 노동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정부는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을 이용하여 노동력 부족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부족한 노동력 수요에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일본은 식민지 조선반도의 풍부한 노동력에 눈을 돌렸다. 조선인을 일본 국내로 끌어들여 노동력부족을 보충하려던 것이다.

(2) '집단모집' 정책

1939년에 시작된 연행정책(連行政策)은 '집단모집' 정책으로 불려진다. 이 말의 의미는 광산과 토목관계 등 일본기업이 조선에서 노동력을 집단적으로 모집할 자유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정부가 감독하고 조성한다는 말이다. 정부는 기업에게 모집노동자수와 조선에서의 모집지역을 할당하였다. 기업은 모집을 위해 직원을 할당된 지역에 파견하였으며, 모집직원은 그 지역의 일본인 경찰관과 행정관의 협조를 받아 노동자를 모집하였다.

'집단모집' 정책은 연행정책으로서서는 이중간한 정책이었다. 첫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내에 두 가지 대립적인 방침이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집단모집' 정책은 말하자면 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즉 내무성은 치안대책의 대상으로만 조선인을 보아, 그들의 일본 도항(渡航)을 억제하는 방침을 192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취하여왔고, '집단모집' 정책 하에서도 지켜지고 있었다. 이것에 대하여 일본국내의 노동자 부족문제를 중시한 다른 성(省)·청(廳)이 많은 조선인을 일본으로 '홀려들게' 하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침의 타협으로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인원 만큼의 모집을 인정한 것이다.

두번째 지적해두고 싶은 점은 노동력 부족이 장기적이며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정부나 기업에서 하지 못했다. 따라서 조선인 노동자는 어쨌든 부족한 노동력을 임시적으로 메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1939년도 조선인 8만 5천 명의 '유입'은 같은 해에 계획되었던 노동력 총공급 113만 9천 명 중 약 7.5%에 불과하여 사실 주요한 공급원이

아니었다. 정부의 지도에 의해 조선인 노동자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되어 만기 후에는 귀국하게 되어 있었다. 1940년의 조사에서는 그들이 노동을 시작한 후 탄광업 대부분 기업의 조선인 노동자는 전종업원의 2할 내지 3할까지가 한도였고, 운수 등의 비숙련작업에 적당하고 체탄 등의 숙련작업에는 적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간한 성격은 계획한 '유입' 노동자수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1939, 40, 41년 매년도마다 계획된 수의 60% 정도 밖에 유입되지 않았다.

(3) 강제적 노무관리

이중간한 연행정책이었지만 실제 모집과 노무관리가 조선인에게서는 강제적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한다.

모집할 때 임금과 노동시간 등의 고용조건, 혹은 광산의 지하노동 등 노동조건에 관하여 조선인에게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모집 달성을 이 적으면 높이려고 일본인 경찰관과 행정관리가 조선인에게 응모를 설득했다기보다는 강제하였던 것이다. 응모하여 계약한 조선인은 전직과 퇴직을 못한다든가, 조선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어만을 사용할 것 등의 지시를 일본에 가기 전에 받고, 집단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각지에 있는 여러 기업의 사무소에 배치되었다. 배치된 사무소에는 헤야(憩間, 部屋) 또는 합바(飯場)라고 불리는 합숙소에서 집단생활을 해야만 했다. 합숙소의 장(長)은 일본인이었고,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조선인의 집단 생활을 관리하였다. 노동현장에서도 일본인 계원(係員)과 어떤 경우에는 동료가 똑같이 조선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명치(明治) 이후 형성된 차별의식으로 일본인은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당연하게 여겼다.

이러한 강제적 성격에 유한다면 '집단모집'은 강제연행이었고 강제노동이었다는 것으로 투쟁지를 수 있다.

(4) 저항투쟁과 도주

조선인 노동자는 강제적 노무관리에 복종하지 않고 다양한 저항을 시

도하였다. 첫번째 저항은 파업, 태업 등 직접적 항의행동이었다. '집단지'에 의해 조선인은 1939년 10월경부터 일하였는데 곧바로 저항투쟁을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10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합계 2,560명의 조선 노동자가 일한 북탄(北炭) (北海道 大手炭鑛企業의 약칭)에서는 도교의 치안당국에 보고된 것만 해도 11건, 연 1,014명이 참가한 저항투쟁이 일어났다. 계약 때 들었던 임금액보다 실제 낮은 것에 대한 항의라든지, 가스폭발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한 항의, 혹은 일본인에 의한 폭행 항의 등이 투쟁의 중심이었다. 이들 투쟁의 대부분은 자연발생적이었고 투쟁을 이끈 지도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저항은 도주이다. 당시 자료에 의한 숫자는 모두 다르지만 계약 만기 전에 약 3할의 조선인 노동자가 연행된 사업소에서 도주하고 있었다. 발각된 자는 도주자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경찰자료에서 추측할 수 있는 도주 이유는 두 가지인데 서로 보완적인 관계였다. 하나는 말할 필요도 없이 노무관리에 대한 불만이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선택한 파업이나 도주는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랐다. 또 하나는 보다 좋은 노동조건을 요구하며 전업하는 것이다. 도주한 조선인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하는 것에 대한 보고서는 없다. 그러나 숙련과 기능을 필요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일본 어딘가에 취업하였을 확률이 높다. 가진 돈은 별로 없었을 테지만, 일본 어디에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여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였고 또한 취업을 원조할 수 있는 조선인 거주지가 각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5) '집단지' 정책의 실패

이제까지 서술한 바대로 '집단지'의 계획 달성률은 60% 수준에 머물렀고, 더구나 연행된 노동자의 약 30%가 도주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전시경제화는 더욱 진행되어 노동력 수요는 높아만 갔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1941년 처음 일본정부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계약만기가 된 조선인 노동자와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집단지' 정책 하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임시 노동자이기 때문에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면 조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노동력에 있어 커다란 장벽이었다. 원래 대부분 조선인 노동자의 계약기간은 정확히 2년이었기 때문에 '집단지'으로 최초로 건너간 노동자의 만기는 1941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다. 그 직전인 9월 석탄광업연합회는 산하의 기업에서 노동하는 조선인에 대해 중요한 조사결과를 얻었다. 그것에 의하면 10월부터 12월에 계약만기가 된 조선인 노동자 5,738명 중 '재계약을 희망하는 수'는 2,588명에 불과하였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재계약을 추진하는 정도의 정책만으로는 노동력 부족을 메울 수 없었다. 즉 계약만기된 조선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 기업에 노동력 부족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사건 때문에 '집단지'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12월 8일 미국·영국과의 전쟁 즉 태평양전쟁의 개시였다. 중국의 침략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더 많은 증산이 요구되었고 노동력 수요는 더욱 높을 것이 예상되었다. 또 태평양전쟁의 개시는 '대동아의 공영'을 건설한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노동자도 또한 그것에 어울리게 노동시킬 필요가 있었다. 임시적인 노동력의 대상과 치안대책의 대상으로서만으로 그들을 보는 것은 명분에서 허락되지 않았다.

(6) '관알선(官斡旋)' 정책

'집단지' 정책은 1942년 2월 각의 결정에 따라 정지되었고, 새로운 '관알선'이라고 일컬어진 정책이 시행되었다. '관알선'의 의미는 조선의 행정기관과 외곽단체가 노동자의 모집 훈련과 일본으로의 연행을 담당하였고, 그 후에는 일본의 각기업에 인도하는 것이었다. 즉 조선의 행정기관인 조선총독부내에 설치된 '조선노동협회(朝鮮勞務協會)'가 모집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조선 각지에 있는 직업소개소가 노동자를 '선정(選定)'하였다. 당시 관청문서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는...공출(供出) 가능한 노무

의 소재 및 공출시기의 완급을 고려하여...할당(割當) 노무자의 선정을 마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출’이라든가 ‘할당’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것처럼 ‘선정작업’은 극히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실제 방식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밤길을 걸어가자는 조선인을 갖가지 구실로 경찰에 연행하여 거기서 ‘응모(應募)’를 ‘권고(勸告)’하고, 조선인이 할 수 없이 ‘응모’하면 어떤 경우는 가족에게 연락도 없이 그대로 일본으로 연행하였다. 또 농촌의 경우 조선인이 화전(火畑)에서 일하고 있을 때 트럭을 몰아 역시 갖가지 구실로 트럭에 태워 그것을 ‘응모’라고 간주하는 행위도 일삼았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계획된 ‘유입’ 노동자수 달성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였다. 1941년도까지 60% 수준이었던 달성률은 1942년도에는 92%로 높아졌고, 1943년도에는 102%로 초과 달성하였다.

그런데 ‘관알선’ 정책하에서도 노동자의 형식적 계약기간은 2년 간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미없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계약이라는 수속을 밟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발견된 대부분의 관청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1942년 12월 문서에서, “소화 18년(1943) 3월 말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에게 “기간연장을 원하지 않는 자가 비록 많더라도 18년(1943) 3월 말일까지는 계속 취업시킬 것”이라고 하여 강제노동을 명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정책 하에서도 필요에 의해서는 ‘국민징용’의 발동에 의해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것이 이미 예정되고 있었다.

(7) 기간 노동력화(基幹 勞動力化)

‘관알선’ 정책은 또 조선노동자를 임시적인 노동력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양적, 질적으로도 기간 노동력으로 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탓이고, 한편으로 그것은 ‘대동아의 공영’을 위해 조선인에게 일본인과 같이 공헌해야 할 ‘영예’를 떠맡긴 셈이다.

조선인 노동자의 기간 노동력화는 기업 내에서 그들의 양적-질적인 위치에서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관알선’ 정책이 시작된 1년 후인 1943년 2월 북해도의 모든 탄광 갱내작업원의 52.5%가 조선인이었다는 점에서 분명하다. 그 내역을 보아도 비숙련작업원으로 볼 수 있는 운반작업원 70% 이상이 조선인이었고, 그 밖에 숙련작업원으로 볼 수 있는 채탄작업원의 57.1%도 또한 조선인이었다. 숙련을 필요로 하는 광산의 채탄작업에 조선인이 많이 할당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관알선’ 정책이 시작되었던 1942년 2월부터 북탄(北炭, 북해도의大手 탄광기업)에는 조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부 양성훈련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간 노동력화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어 패전 직전인 1945년 6월 북탄의 경우 갱내작업원의 70% 이상이 채탄작업원이었고, 실제 그 80%가 조선인이었다. 채탄작업에 조선인이 많은 것은 광산만이 아니고, 조선인만으로 작업그룹을 구성한 막장(체탄의 최전면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존재하고 있었는지도 상상할 수 있다.

1943년 11월 북탄에서 조선인 노무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마에다 하지메(前田一)는 『특수노무자의 노무관리』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일본기업 특히 탄광기업에 있어 조선인 노동자의 기간 노동력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어 조선인 노무관리 담당자에게는 일종의 ‘교과서’가 되었다. 덧붙여 말하면 전후 마에다 씨는 고도 경제성장 기간에 일본 경영자 단체연맹의 전무이사가 되어 ‘일본 노동조합 총평의회’ 등 노동조합운동과 대결하는 일을 하였다.

(8) 저항투쟁의 변화

‘집단모집’ 정책으로 1941년 감소하던 파업 등 저항투쟁도 ‘관알선’ 정책이 시작되던 1942년에는 다시 증가하였고, 도주도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되었다. 이런 양적인 측면에는 이전과 다름없는 저항투쟁이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간의 변화가 있다.

그 첫번째로 조선노동자들이 ‘귀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폭력

미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 퍼져 있어서, 1944년 9월 징용령을 적용하여 조선인을 연행할 것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징용령 적용에 의한 연행이 조선에서 발표되자, 징용되지 않으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만주국'과 중국으로 도주하는 사람, 의사와 짜고 피병으로 속여 입원하는 사람, 갖가지 성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손발을 잘라 지체부자유자가 되는 일조차 일어났다. 더욱이 농촌에서는 징용의 대상이 된 젊은 사람들이 죽창과 낫으로 무장하여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징용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저항에도 징용에 의한 연행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국면은 일본이 패할 것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되어갔다. 미군에 격침된 일본의 수송선과 화물선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45년 3월경에는 미국 의 기뢰의 부설과 잠수함에 의해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해상교통이 마비 상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징용에 의한 연행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사실상 마감한 것이었다.

(10) 연행노동자 수의 개요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는 몇 명이었으며, 어디로 연행되었을까? 오늘날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표-1>은 공안조사청의 「재일조선인의 개황」에 의한 것인데, 조선인 연행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박경식(朴慶植)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에도 수록되어 있다. 다른 개통의 자료도 종합하여 본다면 이 숫자가 실제로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표-1>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광산 특히 석탄·광산과 토목·건축관계에 중점적으로 연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산업에는 비숙련 직종이 많고, 게다가 가혹한 육체노동이 주로 행해졌다. 또한 1944년에는 공장 외에 연행이 급증하였는데, 1944년부터 자료개통이 그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두번째로 연행된 곳은 일본이 주었고, 사할린과 남방(南方)에도 연행

을 포함한 직접적인 항의행동도 증가하였다. '관알선' 정책 하에서 계약 만기가 되어도 노동을 계속해야 하였기 때문에 조선인 노동자가 귀국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요구의 현실성이 폭력으로 호소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두번째로 저항투쟁을 조선 독립운동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여 투쟁을 의식적으로 조직하는 노동자가 등장하였다. 이 경향을 치안당국은 특히 주목하였다. 1944년 1월 전국 경찰부장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예가 보고되는데, 장문이지만 인용한다.

“...소화 17년(1942) 8월 북해도 석장(夕張)탄광에 이임 조선노동자로서 이주한 최원정(崔元貞)이라는 사상적 의식분자가 동탄광에 들어온 이래 다른 이임 노동자에 대해 '일본이 전쟁에 패하면 미국 영국의 원조에 의해 독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선이 독립하면 차별적인 취급도 없고 조선인에게서는 진정한 행복이 온다. 일본을 패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일을 태만하게 하여 석탄이 나오지 않게 해야만 한다.'라고 독립사상을 선전하여 민족의식의 앙양을 기도하면서 태업을 선동하여 동인(同人) 등의 작업장소에서 1일 체면면적이 3미터 90 정도이었던 것이 작년 6월 무렵에 이르러 2미터 60으로 저하시키게 이르렀다고 말하는 사실이 있다.”

변화의 세번째는 일본 기업에 충실하게 일한다고 간주되어 온 조선인 노동자도 또한 조선 독립운동의 한 형태로서 저항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북해도 미쯔비시(三菱) 대석장탄광에 있었던 백운용(白尹用)도 그 한 사람이었다. 백운용은 1942년 12월에 협화회(協和會:조선인을 일본인으로 융화시키기 위한 관체단체) 회장 표창을 받은 '모범적인' 조선인이었는데, 1년 반 만인 1944년 5월에는 조선 독립운동을 위해 석탄 생산저하를 기도하다 체포되었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되는 연행 조선인의 수가 늘어간다는 것은 조선인 노동자들 사이에 조선 독립운동 정신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9) 징용령(徵用令)의 적용

1944년 후반이 되면 당초 계획되었던 유입 노동지수에 부족을 느끼고 추가 유입의 요청이 나타나게 되었다. '관알선' 정책으로는 이 요청에 이

〈표1〉 조선인 노동자 연행 수

연도	구분	「국민동원계 획」에 따른 계 획 수	인 행 수			계
			석탄	광 산	토 목 공장기타	
1939	일 본	85,000	32,081	5,597	12,141	49,819
	사 할 린	-	2,578	190	533	3,301
	계	85,000	34,659	5,787	12,674	53,120
1940	일 본	88,800	36,865	9,081	7,955	55,979
	사 할 린	8,500	1,311	-	1,294	2,605
	남 양	-	-	-	-	814
1941	계	97,300	38,176	9,081	9,249	59,398
	일 본	81,000	39,019	9,416	10,314	63,866
	사 할 린	1,200	800	-	651	1,451
1942	남 양	17,800	-	-	-	1,781
	계	100,000	39,819	9,416	10,965	67,098
1943	일 본	120,000	74,098	7,632	16,969	111,823
	사 할 린	6,500	3,985	-	1,960	5,945
	남 양	3,500	-	-	-	2,083
1944	계	130,000	78,083	7,632	18,929	119,851
	일 본	120,000	66,535	13,763	30,639	124,290
	사 할 린	3,300	1,835	-	976	2,811
1945	남 양	1,700	-	-	-	1,253
	계	125,000	68,370	13,763	31,615	128,354
	계	(155,000)	(68,317)	(15,167)	(14,601)	(128,296)
1944	일 본	290,000	82,859	21,442	24,376	286,432
	사 할 린	50,000	797	229	836	10,622
	남 양	907,300	342,620	67,350	108,644	724,787
총계	계	-	121,574	22,430	86,794	365,382
	조선시 원계수	-	-	-	-	-

*출전 : 박경식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미래사, 1965)
*주 : 종전시 현재수 365,382는 다른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265,382의 오식(誤植)이다.

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술하겠지만, 군속으로 동원된 조선인도 같다. 그리고 이것은 전후에 더욱 커다란 문제를 남기게 되었다.

세번째로 모두 72만 명 이상이 연행되어 전쟁이 끝났을 때 남은 사람은 약 26만 명에 달하였다. 현재 숫자가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연행된 사업소에서 그대로 노동을 계속한 조선인만의 숫자일 것이다. 남은 약 46만 명의 대다수는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으로 사망했거나, 패전 전에 조선에 돌아갔거나, 이 외에 사업소에서 도망가 일본 어딘가에 취업하여 거기서 패전을 맞이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1971년 한국에서 출판된 『일제의 경제침탈사』가 강제연행자 수를 약 113만 명으로 규정하고 강제연행자 수를 약 100만 명대에, 경우에 따라서는 1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신뢰할 수 없다. 그 이유의 하나로 1945년도 연행자 수가 32만 9천여 명이었는데, 그보다 매우 많은 숫자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45년 3월에는 일본과 조선의 해상교통은 완전 마비되었고, 남아 있는 수송선과 화물선은 군수품이나 일본에서 부족한 식량을 대륙에서 수송하는 일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32만 명의 노동자가 연행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일제의 경제침탈사』의 숫자에는 본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강제연행 이외에 어떤 다른 숫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한다.

(11) 일본의 노동운동과 연행조선인 노동자

1945년 8월 15일을 맞이하여 모든 탄광에서 노동하고 있던 조선인 노동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다양한 요구를 기업과 일본정부에 내놓았다. 조속한 귀국, 미지불 임금결산, 전시중 일본인 계원의 폭력적 노무관리와 체임추궁 등이 주요한 요구였다. 이러한 조선인 단체의 조직화와 운동이 패전 후 계속 일어난 것은 그것이 전시 때 저항투쟁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노동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 첫번째로 조선인 단체의 조직과 운동이 일본인에 의한 노동조합 결성을 촉진하였다. 전후 가장 먼저 일본인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던 곳은 홋카이도(北海道) 탄광업에서이다. 그것은 패전으로부터 1개월 남짓인 10

월의 일이었다.

훗카이도 탄광업에는 패전 직후부터 조선인 단체의 활발한 운동이 있었고, 일본인 노동자 중 유력자는 그것을 보고 배우거나 혹은 교시와 원조를 확실하게 받아 조합을 결성하였다. 1956년경에 『탄광조합 10년사』가 많이 출간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도 조선인 단체의 원조에 감사한다고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

두번째로 위와 같은 영향으로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률에 확실히 포함되었다. 194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노동조합법이 기초되어 제정된 시기였다. 기초작업에서 그러한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가 의제가 되었다가 권리있다는 것이 확실히 되었다.

이러한 권리는 유럽에서 당연한 것이었지만, 기업별 조합이 많은 일본에서는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에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2) 군속(軍屬)과 종군위안부

이제까지 서술한 바대로 강제연행 노동자의 고용주는 형식적으로는 민간기업이었다.

그러나 1941년 이후 육해군이 많은 조선인 노동자를 군속으로 고용하여 일본 등으로 송출하였다. 후생성 복원국(復元局)이 전후에 발표한 숫자에는 패전시 재직하던 군속 총수는 15만 4,907명이었다. 노동자의 강제연행과 커다란 차이는 없다. 차이로 지적한다면 20~30%의 군속이 조선에 머물면서 노동했다는 것, 연행노동자보다도 많은 군속이 남방으로 송출되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군속의 동원 이외에 있을 수 없는 것은 종군위안부를 송출한 것이다. 일본군이 파견된 곳에는 위안부도 역시 파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조선인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 수는 수만 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녀들의 송출도 또한 '달콤한 말'로 속이거나 군수생산을 응원할 여자 정신대를 충당하려고 하였다지만 사실은 강제적으로 하였다.

(13) 징병(徵兵)

징병은 강제연행과 군속의 동원보다도 조선인을 전쟁에 협력시켜 회생을 강요했다. 그 실태는 아직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해 두고 만다.

징병제는 1944년부터 조선인 청년에 대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미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령'에 의해 조선인 청년이 육군에 입대하는 길이 열려, 1943년에는 해군에도 같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1934년까지 육해군에 지원한 조선인 청년 숫자는 2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이 지원병 제도는 징병제 시행을 위한 한 지반을 형성했다는 데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부는 1942년 이후인 1944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할 것을 결정·공표하였다. 징병된 조선인 청년들에게 무기를 손에 들게 하기 위하여 사상적 교육을 포함한 준비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징병제 실시를 단행한 것이다.

전후에 후생성 복원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패전 후 육군에 18만 6,980명, 해군에 2만 2,390명의 조선인이 있었다. 이 숫자에는 소수의 장교와 특별지원병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징병에 의한 것이 명확하다. 아직 어느 정도의 조선인 청년이 전선에 내몰아졌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14) 회생자

강제연행되거나 군속에 동원된 조선인의 노동은 가혹하고 위험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회생자가 나왔다. 총 인원수를 조사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마에다 하지메(前田一)의 앞의 책에 의하면 1939년 10월에서 1942년 10월까지 탄광업에 연행된 조선인의 0.9%가 사망하였다. 이 비율은 실제로는 훨씬 높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통계에는 도주하거나 귀국하거나 사망이 아닌 '기타'의 감원(減員)이 5.5%나 있고, 여기에는 행방불명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이 통계에는 병으로 인한 귀국이 4.3%나 있어 전쟁이 치열해진 것과 더불어 증병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예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전

쟁의 후기에 이를수록 노동재해의 보안과 노동자의 영양·의료(醫療)는 소홀하였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연행 당한 전기간의 평균 사망률보다 높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전기간의 평균 사망률을 약 3%로 낮게 보이도, 연행노동자 2만 1천 명 이상, 군속 4,50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놀라운 숫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망이유는 남겨진 단편적인 자료에 의하면 낙반 등의 노동재해와 병사(病死)이다. 보안을 돌보지 않은 미구잡이 증산과 건강을 돌보지 않은 열악한 영양상태·의료시설에 의해 희생된 것이 틀림없다. 사체(死體)는 처음에는 조선에 돌아간 것도 있었겠지만 후기에는 아무렇게나 처리되었다. 유골이 되어 일본명만 기록하여(조선인은 '창씨개명'에 의해 일본명으로 고칠 것을 강요당했다. 그래서 일본명으로는 본명을 알 수 없었다.) 사원에 안치된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사업소 부근에 사체가 매장되어 있는 있다는 것도 자주 지적되었다.

(15) 귀국

일본의 패전은 조선인에게는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것을 의미한다. 원래 귀국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에 귀국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자마자 그들은 조선으로 향하였다.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의 소설 『파주평야』 마지막 부분에 조선인을 가득 태운 트럭이 서쪽 해안으로 질주하는 모습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패전의 날 일본에 있던 조선인은 300만에서 210만 명으로 보고 있다. 강제연행이 시작된 1939년에는 100만 명 전후의 조선인이 일본에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연행된 노동자와 군속으로 패전 전에 귀국할 수 없었던 사람, 거기에 '연고도항(緣故渡航)'이라 불려진 일반 도항자, 이들이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 약 100만 명 증가하였던 것이다. 조선인 귀국자는 일본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로 1950년까지 104만 명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귀국 수속을 기다리지 않고 귀국한 조선인이 꽤 있어 한 국정부는 1949년 말까지 141만 명이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차인 60만 명 전후가 재일조선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들 대부분 사람들은 일본의 조선지배 결과로서 조선에서 생활기반이 없는 사람들로 생겨난다. 이들 가운데 연행된 노동자·군속 및 그 가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연행된 노동자와 군속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할린과 남방에도 송출되었다. 이 사람들은 전투에 휘말렸을 수도 있어 몇몇 섬에서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대해 귀국시켜야 할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특히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은 최근까지 조선에 살고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없었다. 전쟁 전부터 시작되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일본이 조선인에게 가한 고통은 아직까지도 흔적을 남기고 있다.

원폭투하와 재일조선인 피해자

엔도 기미즈꾸(遠藤 公嗣)
아미가다대학(山形大學) 교수

(1) 재일조선인의 형성

1910년 '조선병합'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은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경영은 여러 면에서 조선인으로부터 생활기반을 수탈하였다. 일본의 대자본이 조선에 진출하면 조선 재래의 중소자본과 자영업자는 그것에 압박을 받아 도산하거나, 전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 농촌에 일본의 대지주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였다. 입회지(入會地)를 빼앗기고, 일본인 지주 밑에서 소작을 하였다. 그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고향을 버리고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경영이 진출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에

게 있어 일본은 그나마 생활기반을 만들 수 있는 땅으로 보았다.

1920년대부터 30년대 초에 걸쳐 일본도 또한 “공황에서 공황으로 빠져들어 갔다.”라고 할 정도 불황이었다.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조선보다는 생활이 나은 곳이 일본이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갔던 조선인에게서는 고달픈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혹한 저임금의 일에만 취업할 수 있었다. 명치(明治) 이래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의식은 일본인 사이에 씻을 수 없는 불신감으로 굳어져 있었다. 고생스럽게 일본어를 습득하여 그 자금으로 지역업자가 된 조선인도 적지 않았는데 그 사업은 대부분 같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렇게 일본으로 간 조선인은 원래 가족을 데리고 간 사람도 있었지만 일본에서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었다. 어쨌든 그 자식들은 일본에서 성장하고 학교에 다녔다. 또 소수이긴 하지만 조선에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가정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상황에서 아래서 일본의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조선인에게 있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1939년 시점에서 위와 같이 일본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인은 100만 명 전후였다고 보인다. 더욱이 그해부터 강제연행에 의한 조선인 노동자가 이 숫자에 더해졌다. 또한 군속으로 동원된 조선인도 이 숫자에 더해졌다. 한편 1939년 이전과 유사한 상태에서 일본에 온 ‘연고도향’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45년 8월 시점에 200만 명에서 21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2)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의 피폭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그곳에 살던 많은 조선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폭된 조선인수와 사망자수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한국 원폭피해자협회에서는 히로시마의 조선인 피폭자는 5만 명으로 그 가운데 3만 명이 사망하였고, 나가사키의 조선인 피폭자는 2

만 명으로 그 중 1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두 도시의 생존자는 3만명이었는데 그 중 2만 3천 명이 조선으로 귀국하였다고 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많은 조선인 피폭자가 있다는 것은 일본인이 쓴 피폭체험기록 등에 나온다. 그러나 이 사실은 장기간에 걸쳐 발표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로 첫째, 일본 국내에서조차 원폭피해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중시하게 된 것은 1954년 비키니섬에서 미국 수폭(水爆)실험으로 제오복룡환(第五福龍丸)이 피폭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인 피폭자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조선인 피폭자 대부분이 전후 이미 귀국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피폭자 원호운동(被爆者 援護運動)에서조차 간과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1965년 한일조약체결(韓日條約締結)을 전후하여 변하게 되었다. 조약이 문제가 될 무렵 한국 국내에서 피폭자 문제가 떠오르게 되자 그 정보는 일본에도 전달되었다. 이리하여 조선인 피폭자의 존재는 그제서야 겨우 주목받게 되었다.

1970년대가 되자 조선인 피폭자의 체험수기와 증언 등이 잇달아 간행되어 한국에 있는 피폭자의 본격적인 조사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1981년에는 조선인 피폭자의 기록화 「세계의 사람들에게」(全世界 監督가 완성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지만 조선인 피폭자에 대한 보상이나 보호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것은 현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일본인의 한국사 인식

펴낸곳 / 삼민사
펴낸이 / 최철규
역은이 / 林建彦 · 阿部 洋
옮긴이 / 삼민사 편집부

펴낸날 / 1994년 9월 15일
등록일 / 1978년 6월 15일 · 9-51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5-19
전화번호 / 362-2822 · 312-7729
FAX / 312-1240

©삼민사 1994

값 10,000원